



01 고등교육 정책 동향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4년 정기총회' 개최(대학구조개혁안 정책 건의문 채택)..... 02
- <대교협 2014년 정기총회> 교육부 장관과의 대화 '대학구조조정 예외 불가 강조'..... 05
- 교육부,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시행계획 발표 07
- 전국 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12

02 대교협 활동 소식

- 2014년 입학사정관제 사례발표 워크숍 개최 17
- 특성화고졸 재직자 특별전형 입학생 체험수기 공모전 개최 19
- 2015학년도 대입전형 간소화 정책에 따른 '대입상담을 위한 교원 연수' 운영 20
- 2014년 대학기관평가인증 대학 설명회 개최 21
- 2014년 대학 교수·직원 연수 프로그램 안내 23

03 기타

- 교육부,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 발표..... 25

01 고등교육 정책 동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4년 정기총회' 개최

대학 총장들 “대학개혁, 자율성 보장해야” 한 목소리
대학구조개혁안 정책 건의문 채택



□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서거석 전북대 총장, 이하 대교협)는 2월 5일(수) 서울 양재동 더케이서울호텔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 오전 총회에는 전국 202개 4년제 대학 가운데 165개교 총장이 참석하여 2013년도 결산 및 2014년도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하고, 국립대, 사립대 총장협의회 분과회의를 열어 대정부 정책 건의사항 등을 논의했다.

- 서거석 대교협 회장은 “현재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재정의 위기는 대학의 존립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면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대학 구조개혁안은 학령인구 급감 추세 속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서 회장은 “그러나 유념해야 할 점은 대학구조개혁이 단순히 학생수만을 감축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 특성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와 교육의 질 개선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와 대학이 더욱 긴밀하게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대학 특성 반영방법, 정원 축소방법 등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깊이있게 논의하며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또한 서 회장은 “대학 경쟁력과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교육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그러나 지난 몇 년 동안 대학은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하는 과정 속에서 투자 능력을 상실한 상황”이라면서 “대학에 대한 정부 지원은 최소한 OECD 회원국의 평균수준인 GDP 1.1% 이상은 되어야 한국 대학이 국가경쟁력을 선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이날 오후 대학 총장들은 “대학 구조개혁에 대한 대교협의 입장 및 건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정부에 전달하였다. 이를 위해 ‘대정부 정책 건의 사항 논의’ 섹션에서 국공립대학 총장협의회와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분과 회의를 통해 각각 최종 건의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결과를 종합해 총회 마무리에 맞춰 최종 건의문을 발표했다.
- 대교협은 대학 자율성 보장을 위해 향후 대학구조개혁 추진 전과정에서 대학협의체와 사전 협의를 충분히 거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단순 정원 감축에 그치지 않고 자율적으로 내부구조를 개혁할 수 있도록 대학 고유의 교육목적과 특성, 건학이념을 고려한 평가가 이뤄져야 하며, 외형적 여건 중심의 획일적 평가는 지양돼야 한다고 말했다.
- 등록금 책정의 자율성에 대한 의견도 건의문에 담겼다. 등록금을 일정 비율 이상 인상할 경우 각종 국가 재정지원사업에서 제외하는 데 대한 반발이다. 총장들은 “대학평가 과정에서 법정한도 내에서의 등록금 책정에 대해서는 감점이나 불이익 등을 받지 않도록 해

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대학구조개혁 추진 대학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및 재정 지원 선행, 구조개혁으로 퇴출되는 대학 교직원 및 교육용 재산을 교육용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퇴출대학 소속 교직원 대책 마련, 정부 재정 지원사업에 대학기관평가인증 결과 적극 활용 등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2014년 대교협 정기총회에서 발표한 대정부 건의문 >

정부의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에 대한 대교협의 입장 및 건의

정부는 최근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들의 존립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정부의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은 당면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단순한 대학규모의 축소에 그쳐서는 안 되며, 대학구조개혁은 반드시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동안 우리 대학들은 정부의 반값등록금 정책으로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하였고, 그에 따른 재정악화로 연구 및 교육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다. 그런데 정부의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에는 대학의 연구 및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재정지원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앞으로 대학구조개혁 과정에는 대학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모습의 대학으로 발전되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대학구조개혁은 대학자율성을 존중하고 대학 나름의 교육내실화 노력을 지원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향후 대학구조개혁을 추진하는 전 과정에 걸쳐 대학협의체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칠 것을 요구한다.

둘째, 대학구조개혁을 주도할 대학평가는 대학의 고유한 교육목적과 특성 및 건학이념 등도 깊이 고려되어야 한다. 더욱이 인적·재정적 투자 확대만을 요구하는 외형적 여건 중심으로 획일적 평가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셋째, 대학평가 과정에서 법정한도 내의 등록금 책정에 대해서는 절대로 감점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

넷째,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져야 할 대학의 구조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학구조개혁 기금 및 재정지원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구조개혁 과정에서 퇴출되는 대학의 교지나 교육용 재산 등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교육용 이외의 목적으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소속 교원, 직원 및 학생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2014. 2. 5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총장 일동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4년 정기 총회' 장관과의 대화 진행]

교육부 서남수 장관 '대학 구조조정 예외 불가 강조'

국립·사립·수도권·지방 등 대학 특성·여건 관계없이 평가



□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대학 구조조정에서의 예외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사립대나 국립대, 수도권 대학이나 지방대를 모든 같은 잣대로 평가, 대입정원을 감축하겠다는 의미다. 서 장관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서울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총회에 참석해 이 같이 강조했다. 그는 “대학의 구조개혁 추진 시 국립대와 사립대, 수도권과 지방대를 나눠 따로 평가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많았다”면서도 “그러나 국립대와 사립대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대학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구조개혁 평가를 진행하면 성공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 다만 서 장관은 “사립대나 지방대 등 대학이 처한 여건에 따라 유·불리가 갈리지 않도록 평가방식을 개선할 것”이라며 “대학 협의체인 대교협도 방안을 만들어 준다면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정원 500명~1000명 이하의 소규모 대학들을 배려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서 장관은 “교육의 질적 수준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대학 규모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정원을 줄이지 않겠다는 주장은 사회적 공감대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며 “모든 대학에 대한 구조개혁 평가를 진행, 정원감축을 추진하는 대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앞서 총장들은 대입정원을 줄이기 위한 평가에서 국립대와 사립대,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해 평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신구 세종대 총장은 “대학 구조조정의 전제는 각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

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국립대와 사립대에 대한 별도의 평가지표를 개발해 달라”고 요구했다. 유석성 서울신학대 총장도 “입학정원 500~1000명 미만 대학들은 전체 정원의 10%만 줄여도 대학 경영과 존립이 어려워진다”며 “대학 구조조정 시 소규모 대학과 대규모 대학에 대한 감축비율을 달리 적용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서 장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대교협은 이날 정기총회에서 ‘정부의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에 대한 대교협 건의문’을 교육부에 전달했다. 대교협은 건의문에서 “법정한도 내의 등록금 책정에 대해서는 절대로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올해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에 대해서는 국가장학금 등 재정지원을 위한 대학 평가에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대학들은 법적으로 정해진 상한선(3.8%)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등록금 인상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받아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 대교협은 또 “대학 구조개혁 평가는 대학의 고유한 교육목적과 특성 등이 깊이 고려돼야 한다”며 “더욱이 인적·재정적 투자 확대만을 요구하는 획일적 평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교육부,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시행계획 발표

5년동안(14~18) 1조원 이상 지방대학 육성에 투자
지역산업과 연계한 특성화분야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융성의 근간이 되는 인문, 사회, 예체능 계열 등 별도 지원(460억)

-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창의 인재양성과 지역의 창조경제를 견인할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한다고 발표하였다.
- 이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과제인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일련의 조치중 하나로, 지난해의 「지방대학 육성방안」 수립과('13.11)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에('13.12) 이어 구체적인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방안을 담고 있다.
- 이번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으로 향후 5년간 총 1조원 이상이 지방대학에 투자되며, 이를 통해 지방대학이 지역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1 사업 추진 방향

-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지역사회·문화의 중심으로 지방대학을 육성할 예정이다.
- (특성화 분야 육성) 비교우위를 갖는 학문분야를 집중 육성하여 수도권에 버금가는 경쟁력을 갖추므로써 지방학생 뿐 아니라 수도권 학생들도 역유학을 올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 (창조 경제) 창조경제의 근간이 되는 인문적 소양과 문화 융성을 위해 인문, 사회, 예체능, 자연 계열 등을 별도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 (교육과정 변화 초점) 학부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재정 투입에 따른 양적 여건지표 변화 뿐 아니라 교육과정 개선과 교수·학습 지원 등 교육과정 변화에 초점을 둘 계획이다.
- (대학서열 타파) 지방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와 특성화 분야에 대한 인지도 제고를 통해 대학의 서열이 아닌, 학과의 경쟁력이 대학 진학선택의 기준이 되도록 유도한다.
- (구조개혁과 연계)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정원 감축 및 사회적 변화를 수용한 학사 구조개편 등 구조개혁을 통한 대학의 체질을 개선할 계획이다.

2 주요 내용

[사업 구조]

- (사업 유형) ① 대학 자율 유형 ② 국가 지원 유형 ③ 지역 전략 유형으로 구분되며, 각각 전체사업비의 60%, 25%, 15%가 배정된다.

< 사업 유형 구분 및 예산 배정액 >

유형	대학 자율	국가 지원	지역 전략	합계
예산	1,150억원(60%)	460억원(25%)	300억원(15%)	1,910억원

- '대학 자율 유형'은 대학이 스스로의 여건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특성화할 분야를 신청할 수 있으며, 대학규모별로 신청가능한 사업단 수와 예산액에 제한이 있다.

< 대학규모별 사업단 수 및 예산총액 제한 >

대학 구분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
최대 신청 가능 사업단수	5개	4개	3개
최대 신청 가능 예산 총액	50억원	40억원	30억원

- ‘국가 지원 유형’은 학문간 균형발전과 고등교육 국제화를 위해 인문, 사회, 자연, 예체능 계열 및 국제화 분야를 별도로 지원하며, 대학규모별 신청 가능 사업단 수와 분야별 신청가능 예산에 제한이 있다.

< 대학규모별 사업단 수 및 1개 사업단 예산액 제한 >

대학 규모별 사업단 수		1개 사업단 예산신청 가능 상한	
대학 구분	신청 가능 사업단 수	분 야	1개 사업단 예산 상한
대규모	4	인문, 사회, 자연, 예체능	최대 3억원
중규모	3		
소규모	2	국제화	최대 10억원

- ‘지역 전략 유형’은 지역사회에서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산업과 긴밀히 연계된 특성화 분야를 지원할 계획이다.
- 동 유형은 대학규모와 상관없이 대학별 1개 사업단만 지원이 가능하며, 최대 신청가능 예산은 20억이고 대학원 참여 및 협력대학과의 컨소시엄이 허용된다.

< 요약 : 사업 유형별 신청가능한 사업단 수 및 금액 >

구 분	대학 자율			국가 지원			지역 전략	합 계			
	대 규 모	중 규 모	소 규 모	대 규 모	중 규 모	소 규 모	지역 연고 산업과 연계한 특성화	대 규 모	중 규 모	소 규 모	
주요 내용	대학이 자율적으로 특성화 집중 육성			인문, 사회, 예체능, 자연 계열 및 국제화			대학별 1개	10개	8개	6개	
	신청가능 사업단 수	5개	4개	3개	4개	3개		2개			
	신청 가능액	50억	40억	30억	12~19억	9~16억	6~13억	20억~26억 (대학간 연계 30% 가산)	82~95억	69~82억	56~69억

- (권역)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여 4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학생수·학교수를 고려해 권역별 예산을 균형있게 우선 배분한다

< 권역별 구분 및 예산 배정액 >

권역	충청권 (대전, 충청)	대경·강원권 (대구, 경북, 강원)	호남·제주권 (광주, 전라, 제주)	동남권 (부산, 울산, 경남)	합계
예산	567억원	492억원	400억원	451억원	1,910억원

※ 학생 수 90%, 학교 수 10% 비중으로 권역별 예산 배정

- (대학 및 사업단) 대학은 재학생 수 기준으로 대규모·중규모·소규모로 구분하여, 지원가능한 사업단 수와 금액에 차등을 두었으며, 사업단도 예산규모에 따라 대형·중형·소형 사업단 구분한다.

< 대학규모 및 사업단 규모 현황 >

대학 규모별 구분 (학생수 기준)		사업단 규모별 구분 (사업단 예산 기준)	
대규모	1만 이상	대형	20억 이상
중규모	5천~1만	중형	10억~20억
소규모	5천 미만	소형	10억 미만

[사업단 구성]

- (구성 단위) 사업단은 전공, 학과(부), 프로그램 및 기능으로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으나, 의학계열의 경우 단독 사업단 구성이 제한된다.
- 한편, 단일 전공 또는 학과로 지원한 사업단 중 권역별 10개의 우수사업단을 선정하여 ‘(가칭) 명품학과’로 지정하고, 추가 예산 지원 및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 (참여 학생) 특성화 목적에 맞게 개별 사업단과 대학 전체의 참여 학생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였다.

※ 1개 사업단의 참여학생은 재학생 전체의 1/3 미만, 대학 전체의 사업단 참여학생은 재학생 전체의 1/2 미만. 다만, 입학정원 500명 미만이면서 재학생 총원율이 100% 이상인 대학은 학생 참여제한 없음

□ (중복 불가) 사업단은 두 개의 다른 사업유형에 중복 신청 할 수 없으며, 교원과 학생은 하나의 사업단에만 속하여야 한다.

[평가 구조] _____

- 대학에 대한 평가와 사업단에 대한 평가가 합산되어 사업단이 최종 선정되며, 대학 평가가 30%, 사업단 평가가 70%의 비중을 차지한다.
- 실적과 현재 여건에 대한 평가가 50%, 향후 계획에 대한 평가가 50%로 구성되며, 정량 지표 비중이 높은 과거의 평가와 달리 정성 지표 비중(53%)을 상당히 높였다.

< 평가 구조 >

대 학	사 업 단	합 계
대학 기본 여건(15점)	특성화 분야 기본여건 (35점)	현재여건 (50점)
+	+	+
대학 발전 계획(15점)	특성화 분야 발전 계획 (35점)	향후계획 (50점)
대학 점수 (30점)	사업단 점수 (70점)	사업단 총점(100점)

□ 다만, 계획에 대한 정성 평가 단계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고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대비책들을 마련하고, 향후 연차 평가와 중간 평가에서 특성화를 위한 계획에 대한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여, 지원액 삭감 및 사업단 탈락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사업의 질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3 **고등교육 정책과의 연계**

[대학 구조개혁 종합추진계획 연계] _____

□ 대학 구조개혁 계획과 연계하여 '15~'17학년도 정원 감축에 대해 100점 만점 중 최대 5점의 가점을 부여, 대학의 자발적인 구조개혁을 통한 체질개선을 유도한다.

< 입학정원 감축 규모에 따른 가산점 기준 >

감축시기 \ 감축규모	10% 이상	7% 이상 ~ 10% 미만	4% 이상 ~ 7% 미만
'16학년도까지 감축 목표의 80% 감축	5점	4점	3점
'16학년도까지 감축 목표의 60% 감축	4.5점	3.5점	2.5점

○ 정원감축 뿐 아니라 사회적 변화 요구를 수용한 학과 통폐합 등 구조개혁 노력도 정성적으로 평가(2점)하며, 지난 3년간 정원감축 실적 및 학과통폐합 노력 등도 평가된다.(3점)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과 연계] _____

□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지표에 장학금 지급률(1점)과 등록금 부담 완화지수(3점)를 반영하고, 국가장학금 II유형 참여대학에 대해 가산점(2.5점)을 별도 부여한다.

- 또한, 국가장학금 II 유형의 자구노력 대비 실적이 미달한 대학에 대해서는 향후 지원액 과도 연계할 방침이다.

[대학 거버넌스 체제 구축]

-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대학의 거버넌스 체제 선진화를 위해,
 - 국립대학은 총장직선제 개선 관련 완료 여부를, 사립대학은 대학 평의원회 구성 여부를 평가 지표에 반영(2.5점)하고, 유예 기간 후에는 지원액과 연계할 계획이다.

4 기대 성과

- (기대 성과) 동 사업이 끝나는 5년뒤 지방대학은 교육경쟁력과 인지도에서 수도권대학에 뒤지지 않는 경쟁력을 갖출 것이며, 지방의 학생뿐 아니라 수도권 학생들도 대학의 서열이 아닌 자신의 꿈과 끼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으로 유입되어,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 교육부는 “입학자원 감소라는 시대적 흐름에서 양적 축소는 불가피하며, 오히려 이를 ‘특성화를 통한 질적 개선의 기회’가 되도록 대학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하면서, 지방대학 육성이 박근혜 정부 핵심과제인 만큼 앞으로도 지방대학 지원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5 수도권대학 특성화 사업

- 한편, 교육부는 수도권대학 특성화사업 시행계획도 이날 확정·발표하였다.
 - (예 산) 수도권대학 특성화사업은 서울·경기·인천 지역 대학을 대상으로 하며 2014년 546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5년간 약 3,000억의 예산이 투자된다.

- (권역 구분) 서울과 경기·인천으로 권역을 나누어 학생수와(90%) 학교수(10%) 기준으로 예산을 우선 배분하였다.

권역	서울	경기·인천	합계
예산	336억 (62%)	204억 (38%)	540억원

- (사업 유형) 사업은 ① 대학자율 유형과 ② 국가지원 유형으로 구성되며, 각각 전체 사업비의 75%, 25%가 배정된다.

유형	대학 자율	국가 지원	합계
예산	405억원 (75%)	135억원 (25%)	540억원

- 지원대상, 권역구분, 사업유형을 제외한 다른 모든 부분은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과 동일하게 설계되었다.
- 교육부는 2월 6일 시행계획을 확정하여 사업 공고하고(2.7), 17~19일 권역별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며, 4월까지 접수하여 5월까지 선정평가를 완료할 예정이다.

※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시행계획(안), 수도권대학 특성화 사업 시행계획(안)은 교육부 보도자료(www.moe.go.kr) 참조

전국 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경쟁력 있는 학과 축소” 우려



□ 정부의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의지를 확인했지만, 정원감축과 연계되며 외려 지방 국립대학의 경쟁력 있는 학과들의 정원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 전국 37개 국·공립대 총장은 6일 인천대 송도캠퍼스 다목적홀에서 가진 '2014년도 제1차 전국 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회장 고석규 목포대 총장)'에서 교육부와 대화를 나누며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 이날 국·공립대 총장단은 “누리사업의 경우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당시 국립대학의 경쟁력 있는 학과에서 정원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지방대의 특성화 사업이 누리사업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이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 2004년 정부가 추진한 지방대 혁신역량 강화사업(NURI)은 국립대와 구조개혁 선도대학에 각각 400억 원씩 모두 800억 원을 지원하며 대학 구조개혁을 독려한 바 있다.

□ 이에 교육부는 특성화 사업에 지원되는 비용의 30%를 대학 본부에서 사용할 수 있으니 이를 통해 경쟁력 있는 학과들이 인원을 감축하지 않도록 학교에서 예산 운영을 잘해야 한다는 답변을 내놨다.

□ 한석수 교육부 대학지원실장은 “그런 문제점을 고려해서 특성화 사업단이 예산을 가져가도 70%는 사업단에서 나머지 30%는 대학 본부에서 사용할 수 있게 했다”라며 “특성화 사업 때문에 경쟁력 있는 학과가 축소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 예산을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정원을 줄여 특성화 사업에 선정돼 얻는 예산이 인원감축으로 인해 줄어든 학교예산보다 적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국립대 총장은 “정원감축 10%를 통해 국립대는 연간 1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감소된다. 이는 특성화 사업 예산으로 보완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며 “결국 국립대는 정원도 줄고 예산도 부족해지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 교육부는 정원감축은 언제든 해야 할 숙제라며, 큰 그림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특성화 사업에 참가해서 정원감축이 시작되는 건 2016학년도부터다. 특성화 사업이 아니어도 정원감축은 필수로 이루어지게 돼 있다”라며 “강제감축과 시기상으로 1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특성화 사업을 통해 감축 계획을 짜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 이어 교육부는 정성평가의 지표를 묻는 국공립대학총장들에게 “정성평가는 공통적 지표도 있지만, 특성화 지표가 있다. 비중은 아직 논의 중”이라며 “특성화 계획을 어떻게 해왔는지 대학의 역량을 평가하며 대학의 자율에 맡길 것”이라고 밝혔다.

□ 이 밖에도 이날 국립대 총장들은 교수 성과연봉제 평가기준 개선 건의, 국립대 자원 선진화 시스템 등에 대해 교육부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02 대교협 활동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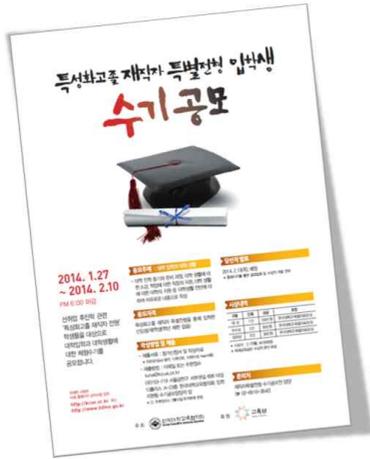
2014년 입학사정관제 사례발표 워크숍 개최

대학별 입학사정관제 및 전형 우수 운영 사례 공유

-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는 2월 5일(수)부터 2월 7일(금)까지 제주라마다프라자 호텔에서 2014년 입학사정관제 지원대학 사례발표 워크숍(66개 대학 발표)을 개최하고 입학사정관제 운영사례를 공유하였다. 이번 워크숍에는 대학입학처장, 교수, 입학사정관 등 대학 관계자 650여명이 참석했다.
- 입학사정관제 사례발표 워크숍은 입학사정관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008년부터 매년 시행해 왔으며, 입학사정관제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임과 동시에 각 대학들의 우수 사례를 공유·확산하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 올해 워크숍은 총 5개 분과와 2개 공통주제로 구성되어 운영되었다. 2013년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에서 중점을 두었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5개 영역(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 운영, 입학사정관 전형의 공정성 및 신뢰성 제고, 입학사정관 전문성 제고, 추수지도 프로그램 운영, 인성평가 강화 등)으로 구분하여 우수 운영 사례를 공유하였다.
 - 분과 1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 운영 사례> : 지역 고교 연계, 농어촌지역 연계, 학생활동 연계 등 고교-대학간 연계 사례
 - 발표대학 : 경북대, 경운대, 광운대, 대전대, 동국대, 명지대, 서울과기대, 서울여대, 아주대, 우석대, 울산과기대, 인하대, 전북대, 전주대, 충남대, 충북대(이상 가나다순)
 - 분과 2 <전형의 공정성 및 신뢰성 제고 사례> : 입학사정관전형 공정성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각종 규정 운영, 공정성확보시스템(유사도검색프로그램, 회피·제척프로그램, 교

- 교 DB프로그램) 운영 등 전형의 공정성 및 신뢰성 제고 사례
 - 발표대학 : 경기대, 계명대, 대구교대, 부경대, 부산대, 서강대, 숙명여대, 순천향대, 송실대, 진주교대, 포스텍, 한국교원대(이상 가나다순)
- 분과 3 <입학사정관 전문성 제고 사례> : 입학사정관 교육 훈련, 입학사정관 이력 관리 시스템, 입학사정관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 입학사정관 전문성 제고 사례
 - 발표대학 : 건국대, 경인교대, 고려대, 공주대, 단국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연세대, 이화여대, 한국교통대(이상 가나다순)
- 분과 4 <추수지도 프로그램 운영 사례> : 대학생활 추적조사 시스템 구축, 멘토-멘티 프로그램 운영 등 입학생 추수지도 프로그램 운영 사례
 - 발표대학 : 강남대, 강원대, 경상대, 경희대, 광주과기원, 광주교대, 동덕여대, 목포대, 상명대, 영남대, 카이스트, 한국외대(이상 가나다순)
- 분과 5 <인성평가 강화 사례> :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인성평가 지표 매뉴얼 개발, 창의적 인성 클러스터모델 개발 등 인성평가 강화 사례
 - 발표대학 : 가톨릭대, 꽃동네대, 동아대, 동의대, 부산교대, 서울교대, 원광대, 전남대, 조선대, 춘천교대, 한림대, 한양대(이상 가나다순)
- 대교협 최창완 대학입학지원실장은 “입학사정관제가 6년간 운영되어 오면서 공교육 정상화, 고교-대학 연계 강화 등 많은 긍정적 성과가 있었으며, 새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입학사정관들의 전문적 역할이 더욱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교협은 향후에도 “변화하는 대입제도에 발맞추어 바람직한 대입 전형 실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며, 이번 워크숍이 입학사정관제가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성화고졸 재직자 특별전형 입학생 체험수기 공모전 개최



□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에서는 정부의 '선취업 후진학'제도 활성화 정책에 따라 교육부의 위탁을 받아 '선취업 후진학 지원시스템 구축 운영 지원 사업'을 2012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동 사업은 특성화고(전문계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취업 후진학 체제를 구축하고 취업 후에 경력 개발과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업경로 구축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 그러나 아직 사회적으로 제도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고, 특성화고졸 재직자의 전형에 대한 정보 미흡 및 재직자 대학 입학에 대한 기업의 인식이 낮은 점 등 제도 활성화에 따른 제한적인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다. 본 제도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특성화고졸 재직자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 입학과 대학 생활"(대학 진학 동기와 준비 과정, 대학 생활에 대한 소감, 학업에 대한 직장의 지원, 대학 생활에 대한 대학의 지원 등) 이라는 주제로 체험수기를 1.27(월)~2.10(월)까지 공모한다.

□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교협 홈페이지 또는 특성화고 포털사이트(www.hifive.go.kr)의 공지사항을 참조하여 참가신청서 및 체험수기를 제출하면 되고, 수상작 발표는 2.13(목), 시상식은 2.17(월)에 "선취업 후진학 지원시스템 구축 사업 우수사례 발표 워크숍"이 개최되는 부산 해운대그랜드호텔에서 거행될 예정이다. 수상작은 추후 선취업 후진학 제도에 대한 기업, 대학 및 학생(학부모 포함)의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2015학년도 대입전형 간소화 정책에 따른

대입상담을 위한 교원 연수 운영

□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 대입상담센터는 2015학년도 대입전형 간소화 정책에 따른 교원 연수가 2월 21일(금) 부산지역을 시작으로 대교협과 17개 시도교육청 공동 주관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 이번 교원 연수는 대입전형 간소화 방안('13.9~10 발표)에 따른 교원과 학부모의 대입전형 변경 사항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학교중심 진학컨설팅 강화 및 '대입전형 간소화 정책'의 현장 착근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 기본·추수·심화연수로 구분하고 내용과 시기를 달리하여 운영하며, 단위학교 방문 추수연수를 통해 현장 연수 수요에 부응하고 연수 효과의 향상을 도모할 예정이다.

□ 연수 시기는 기본연수가 2~4월, 심화연수가 7~8월 중에 진행될 예정이고, 추수연수는 단위학교의 신청을 받아 상시로 지원한다. 연수 대상은 고교 3학년 담임교사, 진로진학상담교사, 학부모 및 수험생 등이다.

□ 교육내용은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하며, 1부는 '2015학년도 대입전형의 이해', 2부는 '2015학년도 진로진학상담프로그램 중심 진학상담'을 주제로 운영한다. 연수 진행을 위한 자료집은 2월 중순 발간 예정이고, 각 연수 장소에서 직접 배부할 예정이다.

2014년 대학기관평가인증 대학 설명회 개최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부설 한국대학평가원은 1월 27일(월) 대교협 22층 회의실에서 '2014년도 대학기관평가인증 대학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 설명회에는 22개 대학 43명이 참석하였으며 2014년 대학기관평가인증 추진 일정 및 54개 평가준거별 평가기준, 평가준거의 대체 및 추가, 대학 특성화 평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특히, 서민원 한국대학평가원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대학기관평가인증은 대학의 질을 보장하고 사회적 공신력을 부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며 대학기관평가인증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또한 이번 대학 설명회에서는 평가인증 유공자 표창장을 수여하였다. 2013년 1차 대학기관평가인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업무담당자로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준 삼육대학교 김재현 팀장을 교육부 평가인증 유공자 장관표창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2014년도 대학기관평가인증을 준비하는 대학 담당자들에게 이전 연도 인증 대학 담당자로서의 모범과 지원이 기대된다.

- 2014년도 대학기관평가인증 일정은 2월 10일(월) 대학기관평가인증 신청 안내 공문 발송을 시작으로 진행되며, 신청대학에 약 6개월간의 자체진단평가결과보고서 집필기간이 주어진다. 이후 9월 초 보고서 제출 마감으로 10월 8일(수)까지 서면평가와 현지방문평가가 실시될 예정이다. 최종 인증결과는 12월 5일(금)에 대학평가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한다.

< 2014년 대학기관평가인증 추진 일정 >

주요 진행 내용	일정
▶ 2014년도 대학기관평가인증 2차 신청 안내 공문 발송	2월 10일(월)
▶ 대안모형 신청 마감	3월 3일(월)
▶ 기본모형 신청 마감	3월 3일(월)
▶ 대체 추가 평가준거 심의 결과 및 인증 대상 대학 확정 통보	3월 31일(월)
▶ 인증수수료 납부 마감	4월 11일(금)
▶ 대학 자체진단평가 수행	3월 3일(월)~9월 5일(금)
▶ 인증 신청대학 담당자 워크숍	4월 중 (4월 하순)
▶ 자체진단평가결과보고서 제출 마감	9월 5일(금)
▶ 서면평가 수행	9월 11일(목)~9월 13일(토)
▶ 현지방문평가 수행	9월 22일(월)~10월 8일(목)
▶ 평가결과 검증회의	10월 10일(금)~10월 11일(토)
▶ 평가결과보고서 작성	9월 5일(목)~10월 24일(금)
▶ 평가결과보고서 초안 대학 송부 및 의견 수렴	10월 27일(월)~11월 7일(금)
▶ 대학 의견서 검토 및 평가결과보고서 확정	11월 10일(월)~21일(금)
▶ 대학평가인증위원회 최종 심의 및 인증결과 공표	11월 24일(월)~12월 5일(금)
▶ 인증패 수여식	12월 5일(금)
▶ 사업만족도 조사	12월 15일(월)~12월 31일(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수원

2014년 대학 교수·직원 연수 프로그램 안내

-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 고등교육연수원은 대학 교수·직원의 역량 배양을 통해 대학 경쟁력을 선도해나가는 최고 수준의 고등교육 전문연수기관으로서, 학습자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학습성과를 극대화하는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또한 대학의 교육과 연구, 사회봉사 업무를 수행·지원할 수 있는 전문 능력의 향상을 지원하고 대학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능력 및 기술습득의 기회를 지속적·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 2014년도 고등교육연수원은 대학 및 대학 구성원의 필요와 요구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수요자 중심의 연수를 지향하고, 대학 행정직원의 직무능력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실무위주의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연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대학 교수의 교수(teaching) 능력 개발에 도움이 되는 효과적이고 다양한 교수법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연수 참여자들 간 행정 실무 경험 및 강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토론과 정보 공유를 촉진하는 참여형 연수를 활성화하고자 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수원 ☎ 053)939-1585, 1586

2014 대학 교수·직원 연수프로그램 안내



- 모든 연수 프로그램의 참가 신청 및 정정은 **연수원 홈페이지** (<http://nrd.kcue.or.kr>)를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 정원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교수법(※신임교수 과정 제외), 실무 기술)의 경우 인원 제한이 있는 관계로 신청기한에 상관없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연수프로그램 일정 확인

- 연수프로그램 안내 책자 및 연수원 홈페이지 연수프로그램 일정 참조
- 참가신청 안내 공문 참조 (*각 연수 강좌별로 연수시작일 한달전까지 대학에 공문이 발송되고, 관련 내용이 홈페이지에 게재됨)

■ 연수 참가신청

- 연수 시작 10일전까지 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자 명단 직접 등재
 - ※ 단, 정해진 운영 프로그램의 경우 인원 제한이 있는 관계로 신청기한에 상관없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연수 참가신청 확인

- 참가신청시 입력한 담당자 이메일 및 연수참가자 이메일로 연수 신청 내역 발송
- 참가 신청 여부는 연수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연수 참가비 납부

- 신청한 프로그램 개최 일주일전까지 참가비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참가비 납부 방법 : 온라인 입금
 - 계좌번호 : 067-01-0499-365
 - 은행명 : 국민은행
- 예금주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연수 참가안내 확인

- 연수 시작 일주일전까지 연수 담당자 이메일 또는 연수 참가자 이메일로 신청한 프로그램의 연수 참가 안내문(안내사항, 일정표, 참가자 명단) 발송
- 참가 안내 확인한 후 신청에 따른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연수원 홈페이지에서 직접 수정

〈 2014년 대교협 개설 연수 프로그램 일정표 〉

구분	과정명	연수일자	구분	과정명	연수일자
교수법	교수법, 그 교정관련 개기	6.25-27	직무연수	대학 신임직원 뉴스타트 연수 과정	5.12-16
	교수법을 위한 프레젠테이션 스킬 향상 과정	7.21-23		대학원업무 담당자 과정	11.12-14
	대학생 동기유발을 위한 교수전략 개발 과정	7.23-25		대학정보공시업무 담당자 과정	5.21-23
	동영상 강의자료 제작 과정(1/2차)	7.14-16 / 7.16-18		도서관업무 담당자 과정	10.29-31
	문제중심학습(PBL) 대학 교수법 과정	7.9-11		산학협력단 예산·회계업무 담당자 과정	10.29-31
	블랜드드 이라닝 및 SNS 기반 교수전략 개발 과정	7.21-23		산학협력업무 담당자 과정	4.9-11
	소셜미디어 기반 스마트 교수법 과정(기초)	7.14-16		수업·학적업무 담당자 과정	6.11-13
	소셜미디어 기반 스마트 교수법 과정(심화)	7.16-18		시설(건물 관리)업무 담당자 과정	6.11-13
	소통과 동기유발을 위한 액션러닝 강의전략 과정	7.28-30		시설(설비 관리)업무 담당자 과정	9.30-10.2
	소통하는 강의를 위한 토의수업 전략 과정	7.23-25		연구업무 담당자 과정	9.17-19
	수업 몰입도를 높이는 정서활동 교수법 과정	7.9-11		예산·회계업무 담당자 과정(일반)	4.30-5.2
	수업 사례를 기반으로 한 효과적인 교수법 과정	6.23-25		예산·회계업무 담당자 과정(심화)	9.2-4
	스마트기기와 SNS 강의를 위한 교수법 과정(1/2차)	6.25-27 / 7.9-11		인사·노무관리업무 담당자 과정	9.2-4
	신임교수 과정(1/2차)	6.30-7.2 / 12.17-19		입학업무 담당자 과정	5.14-16
교수법	아이패드를 활용한 교수능력 향상 과정(1/2차)	7.7-9 / 12.15-17	징학업무 담당자 과정	4.23-25	
	아이패드를 활용한 교수법 과정	6.23-25	취업업무 담당자 과정	4.30-5.2	
	영어강의 능력 향상 과정	7.7-9	평가업무 담당자 과정	4.16-18	
	자기조절학습(SRL) 중심 대학 교수법 과정	7.14-16	학생업무 담당자 과정	4.2-4	
	토의수업 전략 : 퍼실리테이션 기법	7.16-18	대학행정관리자(팀장·부장·과장) 과정(1/2차)	4.30-5.2 / 10.22-24	
	팀기반학습(TBL) 수업전략 과정	6.25-27	대학행정관리자(차장·부차장) 과정 *초한 운영 형태의 연수	추후 공지	
	패러포인트와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교수능력 향상 과정(1/2차)	6.30-7.2 / 7.28-30	기획 및 보고서 작성 실무 과정	5.28-30	
	프레젠테이션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교수법 과정(1/2차)	7.23-25 / 12.15-17	기획력 향상 실무 과정	11.26-28	
	학생면담지도 기법 및 대학생 이해 과정	6.23-25	대학 교직원 리더십 능력 향상 실무 과정	10.15-17	
	직무연수	검사업무 담당자 과정	4.16-18	대학조직 갈등관리 및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 실무 과정	6.18-20
		교재업무 담당자 과정	5.21-23	대학행정력 향상을 위한 문서작성(민집 및 디자인) 실무 과정	11.5-7
		교무업무 담당자 과정	4.2-4	대학행정 사무 및 문서관리 실무 과정(1/2차)	5.28-30 / 10.15-17
		교수·학습센터업무 담당자 과정	4.9-11	대학행정예 바로 쓰는 통계활용기술 실무 과정	6.18-20
		구매업무 담당자 과정	9.30-10.2	산학협력단 세법(자세히 알기) 실무 과정	9.24-26
국제교류업무 담당자 과정		11.12-14	엑셀 데이터베이스 활용 대학행정 실무 과정	9.24-26	
기획업무 담당자 과정		4.23-25	엑셀 매크로와 VBA 활용 대학행정 실무 과정	11.5-7	
대외협력·홍보업무 담당자 과정		9.17-19	엑셀 함수 활용 대학행정 실무 과정	5.28-30	
대학사회봉사업무 담당자 과정		10.22-24	입찰·계약업무 실무 과정	6.18-20 / 11.26-28	
대학성취회 고충상담원 직무연수 과정		7.2-4			

[기타]

대학 교육의 질 제고 및 학령인구 급감 대비를 위한 교육부,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 발표

2023학년도까지 3주기로 나눠 대학 정원 16만명 감축

모든 대학 대상 5등급으로 절대평가, 등급별 차등적 정원감축 등 구조개혁 추진

□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정원감축 등을 추진하는 내용의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창의와 융합을 근간으로 하는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서는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갖춘 인재 양성이 핵심이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의 질 제고를 통한 대학 경쟁력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대학 평가는 취업률·충원률 등 정량지표 위주의 상대평가로 인하여 대학교육의 질 관리 측면에서는 미흡하였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아울러, 학령인구의 감소로 앞으로 10년 동안 대학 입학자원이 급격히 줄어들어 2023학년도에는 현재의 입학정원보다 16만 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방지하는 경우, 대학의 질적 수준과 관계없이 지방대학·전문대학 중 상당수가 존립이 어려워지고, 나아가 지역간 균형발전 및 고등교육의 경쟁력 제고에도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우려된다. (고교졸업생 수 전망(명) : 63.1만('13) → 54.9만('18) → 39.7만('23) → 40.9만('25))

□ 이에 따라 교육부는 대학의 양적 규모는 대폭 줄이면서, 교육의 질은 높여 대학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구조개혁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 동 계획은 권역별 토론회, 대학 그룹별* 협의회, 총장 간담회, 산업·경제계 의견 청취, 관련 부처 협의 및 국가정책조정회의('14.1.23), 대학구조개혁위원회('14.1.27) 등 40회 이상의 의견수렴과 정책연구를 거쳐 마련되었다.

* 수도권/지방, 대학/전문대, 국·공립/사립,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등

□ 구조개혁 계획은 전체 대학대상 정원감축, 새로운 대학 평가체제 도입, 구조개혁의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 등을 담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평가결과에 따른 정원감축 실시

□ 대학 입학자원 규모 변화를 고려하여 '17학년도까지 4만명, '23학년도까지 총 16만명의 입학정원을 감축한다.

○ 이를 위해 '22년까지를 3주기로 나누어 주기마다 모든 대학을 평가하고, 평가등급에 따라 최우수 대학을 제외한 모든 등급에 대해 차등적으로 정원을 감축할 계획이다.

< 주기별 정원감축 목표(안) >

평가주기	1주기('14~'16)	2주기('17~'19)	3주기('20~'22)
감축 목표량	4만명	5만명	7만명
감축 시기	'15~'17학년도	'18~'20학년도	'21~'23학년도

○ 대학과 전문대는 설립 목적과 평가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1주기 정원감축 시에는 현재의 정원 비율(63:37)을 고려하여 대학과 전문대 간 정원감축 규모를 구분(대학 25,300명, 전문대 14,700명)하며

○ 교육대학 및 교원대는 별도의 평가를 통해 정원조정을 실시한다.

□ 금년부터 모든 정부재정지원사업 평가에 구조개혁 계획(실적)을 반영함으로써 자율적 정원감축도 병행한다.

○ '14년부터 각종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여 감축한 정원은 추후 구조개혁을 위한 평가에 따른 정원감축 시 모두 인정하여, 평가 주기 내 연도별로 정원감축이 분산되도록 유도·조정할 계획이다.

○ 구체적인 구조개혁 연계 방법은 사업별 추진계획에서 제시되며, 금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특성화사업의 추진계획은 2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 예산 규모 : 수도권 대학 특성화사업 546억원, 지방대학 특성화사업 2,031억원,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2,696억원

2 대학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새로운 대학평가체제 도입

- 대학 특성화와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새로운 대학 구조개혁 평가체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 종전에는 정량지표 위주의 상대평가 방식에 따라 하위대학에 대해서만 재정지원제한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으나,
- 새로운 구조개혁 평가는 정량지표 외에 정성지표를 도입하고 절대평가로 전환된다.
- 또한 모든 대학을 평가결과에 따라 5등급으로 분류하고 등급별로 입학정원 감축,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제한, 국가장학금 미지급, 학자금대출제한, 지속적 퇴출 유도 등 차등적인 구조개혁 조치가 취해지며, 2회 연속으로 매우미흡 등급을 받는 대학은 퇴출되게 된다.

〈 5개 등급별 구조개혁 조치 〉

등급	구조개혁 조치
최우수	정원 자율 감축,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
우수	정원 일부 감축,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
보통	정원 평균 수준 감축,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
미흡	정원 평균 이상 감축,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국가장학금 II 유형 미지급, 학자금 대출 일부 제한
매우미흡	정원 대폭 감축,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국가장학금 I, II 유형 미지급, 학자금 대출 전면 제한, 자발적 퇴출 유도

* 국가장학금 I 유형 : 소득연계 차등지원
 국가장학금 II 유형 : 대학자체노력(등록금 인하, 장학금 확충) 연계지원

- 평가영역 및 내용은 대학 운영과 교육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게 된다.
- 평가지표 및 지표별 반영비율 등은 향후 국내·외 대학 평가지표 분석, 의견수렴 등을 거쳐 초안을 마련하고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 공통지표 및 특성화지표로 구분하되, 대학과 전문대학의 평가지표는 별도로 설정하여 평가하게 된다.
- ※ 평가지표 예시
 (공통지표) 대학 발전계획, 학사운영, 창업, 교직원, 학생 선발 및 지원, 교육시설, 대학(법인) 운영, 지역사회 연계 등사회공헌, 교육성과 등의 영역별로 구성
 (특성화지표) 교육, 연구, 사회봉사, 평생교육, 산학협력, 국제화 등 각 대학이 가진 강점분야를 중심으로 한 특성화 성과 및 계획

3 지속적 구조개혁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

- 향후 구조개혁 정책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중심으로 추진하게 된다.
- 교육부는 구조개혁 계획 수립 및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등 구조개혁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구조개혁 계획, 평가 계획, 평가지표 및 평가등급, 후속조치 등에 대해 심의하게 된다.
- 아울러 교육부는 비상설 평가단 운영 등 평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무조직 운영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교육부는 지속적·안정적인 구조개혁 추진을 위해 (가칭)「대학 구조개혁 및 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대학 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결과에 따른 정원감축 등 구조개혁 조치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동 법률의 주요 내용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설치, 정원감축에 따른 재산 및 회계 특례*, 해산 및 잔여재산의 귀속 특례, 평생교육기관으로의 전환 등 자발적 퇴출경로 등이다.
- * 정원감축에 따른 기준 초과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 허용 등

○ 또한, 구조개혁 추진과 함께 대학의 신설을 억제하고, 재정이 열악한 영세 사학의 설립을 방지하기 위해 대학 설립 심사 시 국가 교육정책과 학령인구 감소 등을 고려하고, 수익용 기본재산 최소 확보기준을 일반 대학의 경우 현재 1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등 인가요건을 강화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기로 하였다.

※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 추진

□ 한편, 그동안 대학 구조개혁 평가의 일환으로 시행해왔던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는 금년에 한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추후 본격적인 대학 평가 시행 여부를 감안하여 실시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 교육부는 금년 상반기에 동 법률을 제정하고 1주기 대학 구조개혁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 서남수 장관은 이번 구조개혁 계획 추진을 통해 대학 교육의 질이 높아지고, 지방대·전문대가 상생 발전하는 고등교육 생태계 조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대학 구조개혁은 대학이 우리나라 교육·경제·문화에 차지하는 역할을 감안할 때 교육부만의 일이 아닌 범 정부차원에서 함께 나서야 하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며, 특히 구조개혁 법률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범사회적인 협력과 관심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